

2004년 17대 총선

정당정책평가 발표
기자회견

2004. 4. 12.

2004총선시민연대

www.RedCard2004.net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 전화 02)732-9787~91,723-0808 / 팩스 02)723-0584

차 례

1. 정당정책평가의 목표와 방법

1)의의와 목표

2)대상과 방법

(1)대상 정당

(2)대상 정책분야

(3)평가 방법

2. 총평

1)민주노동당

2)열린우리당

3)새천년민주당

4)한나라당

5)자민련

<표>각 당 정책평가 요약

3. 분야별 정책평가

1)반부패

2)정치개혁

3)조세형평

4)과거청산

5)평화통일

6)양성평등

7)지속가능한 환경

8)실업 및 비정규직

9)사회적 권리

10)시민적 권리

11)교육 민주화

1. 정당정책평가의 목표와 방법

1) 의의와 목표

○정당은 정책을 제시해서 시민의 지지를 구하고, 국회에서 토론을 벌여 국정을 펼쳐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책은 정당의 처음이자 끝이다. 정당은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또한 제시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각 정당이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유권자가 바로 서야 정당이 바로 선다. 정당이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정을 올바르게 펼치도록 하기 위해, 유권자는 정당이 정책의 개발과 실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늘 감시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번 17대 총선에서부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실시됨으로써, 유권자는 ‘1인 2표’, 즉 지역구 의원에 대한 투표와 정당에 대한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의원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함께 각 정당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판단기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정당에 대한 판단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각 정당의 정책이다.

○이에 2004총선시민연대에서는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당평가의 유의미한 자료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직접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각 정당이 중요한 정책사안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의 차이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정책들의 실현을 위해 실제로 어떠한 노력을 펼쳤는가를 검토한다.

둘째, 정책적 차별성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각 정당이 시민사회의 다양한 개혁요구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 정당이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제대로 정책화하고 있는가를 검토한다.

2) 대상과 방법

(1) 대상 정당

○2004총선시민연대가 실시한 정당정책평가의 대상은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다.

(2) 대상 정책분야

○2004총선시민연대 정책위원회에서는, 16대 국회 회기기간 동안 국민적 관심과 쟁점이 되었던,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개혁요구가 뚜렷이 드러났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평가대상 정책분야를 선정하였다. 여기에 여전히 완결되지 않았거나 17대 국회에서 새롭게 제기되어야 할 과제도 분야에 따라 평가대상에 일부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서 선정된 정책분야는 총 11개 분야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각 정책분야별로 2-3가지 정도의 대표적 정책과 법안들을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각 정당들의 태도와 입장, 공약 등을 평가하였다. 선정된 11개 정책분야는 다음과 같다.

- ▷반부패
- ▷정치개혁
- ▷조세형평
- ▷과거청산
- ▷평화통일
- ▷양성평등
- ▷지속가능한 환경
- ▷실업 및 비정규직
- ▷사회적 권리
- ▷시민적 권리
- ▷교육 민주화

(3) 평가 방법

○정당정책 평가주체

-2004총선시민연대 정책위원회(공동정책위원장 : 손호철 서강대학교 교수, 손혁재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전체 조정 역할을 수행하였다.

-각 분야별 평가는 관련분야 전문가(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최영태 회계사,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 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 윤대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김정인 박사, 장유식 변호사 등), 관련분야 시민사회단체(참여연대 등), 총선연대기구(총선교육연대, 총선환경연대 등)가 실시하였다. 단, 여성정책 평가는 총선여성연대의 자문을 거쳤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당 정책자료모음

-각 당 17대 총선공약집(※새천년민주당은 4월 2일, 자민련은 2004년 4월 7일에 정책공약을 발표)

-16대 국회 해당 분야 상임위 회의록, 표결결과, 대정부 질의, 대표연설 등 국회의정활동 자료

-관련 사안에 대한 각 당의 논평이나 성명 등의 자료

-관련 사회운동단체의 조사자료나 의견(경실련 정당정책평가자료, 총선교육연대 정당정책평가자료, 총선여성연대 공천반대자 선정기준 자료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 및 회신 자료(사회복지분야)

-관련 사안에 대한 언론검색 자료

○평가기준

-해당 분야의 주요 정책들을 5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개혁성, 실천의지, 일관성/체계성, 실제 성과 여부, 실현가능성(17대 총선공약의 경우)’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작업을 진행하였다.

-16대 국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의 경우, 각 정당들이 실제 어떤 약속과 주장을 하였고,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17대 공약에 대한 평가의 경우,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공약의 유무,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개혁성 등을 검토하였다.

	평가기준	
16대 의정활동	개혁성 · 실천의지 · 체계성	실제 성과
17대 총선공약	개혁성 · 실천의지 · 체계성	실현 가능성

-5가지 평가기준 가운데 ‘개혁성’을 더욱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2004 총선시민연대’의 정당정책평가가 ‘모든 정당의 모든 정책’을 검토하는 작업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과 쟁점을 불러 일으켰던, 그리고 시민사회의 개혁적 요구에 대한 정당의 반응성과 수용성 여부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5가지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 결과는 (○), (△), (×)라는 3단계로 재구성하여 표시하였다. 아예 정책 자체가 없거나 입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으로 표시하였다. 각 분야 정책들에 대한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분야 평가를 냈다. 이 때 ○=3점, △=2점, ×=1점, (·)=0점으로 처리하였다(단, 11개 분야별 평가대상의 차이가 있고, 이를 반영한 분야별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총점을 별도로 계산하지는 않았다).

2. 총평

○각 정당들의 16대 국회에서의 활동과 발언, 17대 공약들을 살펴 본 결과 정당간 정책차별성이 일정하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내용에서는 대단히 큰 한계와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각 당별 총평 및 분야별 평가 참조).

○이런 차이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의 부재와 부실 문제가 확인되었다. 특히 ‘부패정치청산’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17대 총선에서, 반부패를 위한 각 정당의 제도적 대안이 지극히 부실하다는 점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정당정책 평가에서 ‘지방분권/주민자치’에 대한 정책평가를 시도하였으나, 각 정당의 관련 정책이 거의 없어 평가 자체를 할 수 없었다. ‘지방분권/주민자치’는 21세기 최대의 화두이자 과제인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당정책이 없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시작되면서 정당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당의 정책을 평가할 자료나 정보 자체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실하다는 사실은 우리 정치의 후진적 현실을 극명히 드러내 보인 생생한 증거라 할 것이다.

○정당은 정책으로 자신의 존재이유를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기존 정당들은 정책의 차이도 뚜렷하지 않으며, 또한 정책의 내용도 상당히 부실한 상태이다.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정책정당이다. 민주주의는 ‘정쟁’이 아니라 ‘정책’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기존 정당들은 이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1)민주노동당

▷거의 모든 분야에서 뚜렷한 개혁성과 일관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다른 4개 정당과 확연히 구분됨(단, 반부패 분야의 경우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5개 정당 모두 충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우선, 민주노동당은 비록 원외정당이긴 하지만, 거의 전 분야에서 가장 개혁적인 정책을 제시하였음은 물론, 가장 높은 정책 일관성을 보여 준 정당으로 평가되었다. 시민운동진영의 각종 개혁적 요구들을 정책에 충실히 수용·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정당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정책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 ‘정책정당’의 면모를 가장 명확히 드러내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사회복지정책 등 일부 정책의 경우, 민주노동당 정책의 '실행가능성'이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담고 있고, 반부패정책이나 노인정책 등 일부 분야에서는 깊이 있고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2) 열린우리당

- ▷정치개혁, 조세형평, 과거청산, 양성평등, 시민적 권리 분야에선 비교적 개혁적인 것으로 평가됨
- ▷평화통일,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에서 반개혁적인 것으로 평가됨
- ▷실업 및 비정규직, 사회복지 분야에선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등 3당의 정책적 차별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남

열린우리당은 시민운동진영이 그 동안 요구해 온 주요한 개혁정책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민감성'과 '수용성'을 보여 왔음은 확인되었다. 정치개혁, 조세형평, 과거청산, 양성평등을 위한 호주제 폐지 등의 분야에서 일정한 개혁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는 '평화'와 '환경' 영역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지지하여 '평화'라는 가치를 위협하였고, 새만금간척사업과 부안핵폐기장 문제 등에서도 '반환경적' 태도로 일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를 서민정당, 민생정당이라 규정하면서도 실업 및 비정규직, 사회복지 분야에서 뚜렷한 차별성과 적극적 정책제시능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시장 개방 등 민감한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3) 새천년민주당

- ▷평화통일, 양성평등 분야는 비교적 개혁적이 것으로 평가됨.
- ▷정치개혁, 조세형평, 과거청산, 시민적 권리 분야 등에서 보수적이거나 반개혁적인 것으로 평가됨
- ▷실업 및 비정규직, 사회복지 분야에선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등 3당의 정책적 차별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남

분당 이전 새천년민주당의 정책들은 일정한 개혁성을 보였으나, 분당 이후 정치개혁, 조세형평, 과거청산, 시민적 권리 분야에서 보듯 보수적 정책기조가 확인되었다. 그 결과 민주당은 시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 정책의 제안과 추진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평화통일과 양성평등 분야에서 비교적 개혁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라크 2차 파병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를 표명하였고, 최근에는 파병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등 평화통일 분야에서 개혁성을 드러냈고, 호주제 폐지에 대한 분명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부안 핵폐기장 건설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환경분야에서도 열린우리당에 비해 다소 개혁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4)한나라당

▷대체로 보수적이며 반개혁적인 것으로 평가됨

▷실업 및 비정규직, 사회복지 분야에선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등 3당의 정책적 차별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나라당은 그 동안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되었던 각종 개혁정책과 주장에 대해 둔감하거나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정치개혁, 조세형평, 집시법 개악, 호주제 폐지, 과거청산, 평화통일 등 거의 대부분의 정책영역에서 한나라당은 뚜렷한 보수 성향, 나아가 반개혁적 성격을 보여 주었다.

다만, 한나라당은 환경정책에서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보다도 좀더 구체적인 문제 해결노력을 보이기도 했으나 '친환경적' 정책정당으로 평가내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또한 교육정책 등 일부 분야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분명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었다.

(5)자유민주연합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보수성과 반개혁성 뚜렷한 것으로 평가됨

▷전반적인 정책의 부실 문제도 함께 지적됨

자민련의 경우,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보수성과 반개혁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시민사회의 개혁 요구에 대해 가장 둔감하고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자민련은,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정당으로 평가된 한나라당이나 다른 정당들과 달리 중요한 정책사안에 대한 정당의 입장과 정책을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실제 17대 총선 공약 또한 가장 늦게 발표하였다. 자민련은 보수성과 반개혁성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책적 역량'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표> 각 당 정책평가 요약 (○=3점, △=2점, ×=1점 ·=0점)

	주요정책 및 법률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반부패	사정기구 개혁	×	×	×	×	×
	기타 부패통제제도 개혁	×	△	△	×	△
	분야별 평가	2	3	3	2	3
정치개혁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	△	×	○
	선거연령 18세 인하	×	○	○	×	○
	인터넷 실명제 도입	×	×	○	×	○
	분야별 평가	3	5	8	3	9
조세형평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	○	○	·	○
	부동산 보유세 강화	×	△	○	△	○
	분야별 평가	2	5	6	2	6
과거청산	친일진상규명법	×	△	○	×	○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	×	△	○	×	○
	분야별 평가	2	4	6	2	6
평화통일	이라크 파병	×	○	×	×	○
	북핵 및 대북정책	△	△	△	×	○
	한미관계 재구축	×	△	△	×	○
	분야별 평가	4	7	5	3	9
양성평등	호주제 폐지	×	○	○	×	○
	분야별 평가	1	3	3	1	3
지속가능한 환경	새만금 간척사업	△	×	×	×	○
	부안 해폐기장 건설	△	△	×	×	○
	분야별 평가	4	3	2	2	6
실업 및 비정규직	청년실업	△	△	△	×	○
	노인인구 재취업	△	△	△	△	△
	비정규직 노동자	△	△	○	×	○
	분야별 평가	6	6	7	4	8
사회적 권리	사회복지예산 확충	×	×	×	×	△
	빈곤문제와 공적부조	△	△	○	×	△
	국민연금제도 개혁	△	△	△	△	△
	의료보장제도 개혁	△	△	△	×	○
	분야별 평가	7	7	8	5	9
시민적 권리	집시법 개악	×	×	△	×	○
	분야별 평가	1	1	2	1	3
교육 민주화	고교 평준화	×	△	△	×	○
	교육시장 개방	×	×	·	×	○
	분야별 평가	2	3	2	2	6
※11개 분야별 평가대상의 차이가 있고, 이를 반영한 분야별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총점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음.						

3. 분야별 정책평가

1) 반부패

● 분야 총평

각 당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균형잡힌 평가를 위해서는 정책의 개혁성과 공약의 실천의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실천의지를 객관적으로 가늠하기 위해, 각 당이 16대 국회에서 반부패정책에 대해 보인 태도(구체적으로는 표결, 당론), 17대 공천자 중 부패전력을 갖고 있는 후보자의 수, 각 정당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단, 원내진입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은 부패환경의 노출정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당의 실천의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 16국회에서 원내 의석을 갖지 못한 민주노동당은 제외하였다).

(1) 한나라당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특별검사제 상설화, 검찰 인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의 제도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은 특검제 상설화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는데 이번에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이는 다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과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검찰 인사위원회의 외부 인사비율을 강화하고 이를 심의 의결기구로 격상하는 공약도 긍정적이다.

한나라당은 검찰 개혁 외의 반부패 정책으로,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 전담 감찰기구를 신설,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의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실현 가능성이 취약하거나, 기존의 부처별 감찰 기구와의 권한 충돌을 낳을 우려가 있다. 한나라당은 총선공약에서 돈세탁방지제도 개선, 불법정치자금 환수 등 시급한 반부패 정책 현안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와 국민소환제 입법화, 고위공직자 자산백지신탁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총선공약'을 발표했으나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정당 개혁과 관련된 반부패 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약의 실천의지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보였다. 대선 이후 원내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던 원내 다수당으로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제도 개선보다는 정쟁의 성격이 짙은 개별 특검 도입에 주력하고 나아가 특검제도를 정략적으로 악용하기도 했다는 점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자당의원들의 부패

수사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부결, 서청원 의원 석방동의안 가결, 수사중인 검사의 의회소환 등의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또한, 한나라당은 17대 총선에서 6인의 부패전력자를 공천했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수수 액수는 '세풍' 약 166억원, '안풍' 1197억원 2002년 대선자금 840억원으로 총 2200억원대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나라당은 이를 단 한푼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은 총선을 앞두고 당 연수원을 팔겠다는 선언을 했으나 그 액수가 불법 사용한 금액에 턱없이 모자랄 뿐 아니라 실현 여부도 미지수이다.

이처럼 한나라당은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지만, 정치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검찰을 독립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당 의원 감싸기에만 급급하는 등 의회와 정당의 권한을 남용하여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태를 계속 보여왔다. 또한 실제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각종 불법정치자금을 그 동안 계속 수수해 오면서 검찰권 견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정기구개혁안을 제출해 왔다는 것은 정책제안의 의도를 의심케 하는 점이라 할 것이다. 더욱이 부패전력자 다수를 17대 총선에서 다시 공천하고, 불법정치자금의 국고귀속을 미루고 있는 점 등은 한나라당의 반부패 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한다.

(2) 새천년민주당

민주당의 경우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16대 국회에서 특검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국민의 정부' 당시 검찰개혁을 좌절시키는데 앞장섰던 법무부장관과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었던 몇몇 검사들을 17대 후보로 공천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이외 나머지 공약 중에서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와 납세자소송제도 도입, 인사청문회 확대 정책 등이 눈에 띈다. 다만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민주당이 16대 국회에서 반대했으며, 인사청문대상의 확대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충돌된다는 점에서 실제 추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10명의 부패 관련 인사를 공천하여 다른 정당에 비해 훨씬 많다. 민주당/열린우리당은 2002년 대선에서 114억원의 불법자금을 모금하였다. 또한 민주당의 불법정치자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권노갑씨와 박지원씨가 모금한 약 250억원대의 불법자금을 들 수 있다. 비록 이 자금이 분당 이전 민주당으로 유입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각 당의 불법자금에 직접적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지만, 권력형 비리라는 점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모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3)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은 지난 대선 때 제시했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을 다시 공약으로 꺼내들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집권이후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을 위한 가시적인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다른 검찰 개혁 조치도 대통령 개인의 의지 표명을 제외하고 제도적 성취로까지 나아간 것도 전무하다. 따라서 이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 대부분은 16대 국회에서 특검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열린우리당은 정치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를 반드시 기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총수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 위축을 이유로 수사의 조기 종결과 선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 공약 역시 그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 열린우리당은 부패사범의 경우 10년간 공직진출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열린우리당 스스로는 부패 전력에 있는 후보자를 5명이나 공천시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백지위임신탁 도입이나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으나 실천의지는 불확실하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열린우리당/민주당이 2002년 대선당시 사용한 불법자금의 액수는 114억원이며 이중 단 한 푼도 국고에 귀속되지 않았다. 또한 박지원, 권노갑씨가 조성한 약 250억원대의 불법자금에 대해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열린우리당 역시 동일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4) 자유민주연합

자민련의 경우 다양한 부패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내용이 대체로 기존에 나왔던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이어서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럽고, 부패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대안 제시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자민련은 16대 국회에서 특검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부패방지법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돈세탁방지제도 등에 대해 소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였고, 다른 반부패 정책에도 적극성을 보인 바 없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17대 총선의 자민련 후보 중 부패관련 인사는 2명이다. 그러나 2명은 자민련 현역 의원 수에 비할 때 다른 당보다 적은 수라고 볼 수는 없다.

(5)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의 경우 불법정치자금의 전액 국고 환수 공약이나 불체포 특권의 포기 등의 공약이 눈에 띄인다. 민주노동당의 불법정치자금 환수 공약은 환수의 대상(16대 대선불법자금), 방법(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와 국고보조금과의 상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민주노동당의 반부패정책은 발생한 부패문제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맞추어져 있을 뿐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반부패제도의 제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한다는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정책 이외에 아무런 사정기구 개혁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패방지를 위한 핵심정책인 돈세탁방지제도 등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노조에 의한 부패 통제 역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보다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민주노동당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사례가 없으나 원내진입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은 부패환경의 노출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비교하기 어렵다. 다만 민주노동당은 진성당원의 당비로 재정을 운영해오는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부패요인이 다른 당에 비해 적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요 정책별 평가

○사정기구(검찰 및 부패방지위원회 등) 개혁

한나라당	16대 국회에서 특검 도입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실제 대선 이후 한나라당은 제도개혁보다는 개별 특검의 도입에 주력하였고, 17대 총선공약으로도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특검 상설화, 검찰인사위원회를 권한 강화 등 검찰개혁과 관련된 다소 진전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공약과는 달리 16대 국회 원내 과반수 정당으로서 공약을 제도화하는데 소홀했고, 무엇보다도 특검의 정략적 악용, 자당 부패의원 수사에 대해 체포동의안 부결, 석방동의안 가결 등을 강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반부패 제도의 정책적 목표라 할 수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
민주당	16대 국회에서는 특검에 반대하였고, 17대 공약에서는 사정기구 개혁방안을 특별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열린우리당	16대 국회에서 특검에 반대하였고, 대선 당시 고위공직자비리조사기구 설치와 특검 상설화 주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분당 이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공약을 폐기했고, 다른 검찰개혁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 시도를 보여 주지 않았다. 또한 17대 공약에서도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검찰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자민련	16대 국회에서 특검에 반대하였고, 17대 총선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기구 설치와 특검 상설화 공약을 제시하였다. 자민련 역시 검찰 인사위원회에 대한 특별한 입장이 없다.	×
민주노동당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 부여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 특별한 다른 정책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	×

○사정기구 개혁 이외의 반부패정책

한나라당	총선공약에서 돈세탁방지제도 개선, 불법정치자금 환수 등 시급한 반부패 정책 현안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당의 개혁과 관련된 반부패 현안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 전담감찰기구 신설, 고위공직자 비리전담 감찰기구를 설치, 감사원 직무감찰기능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기존 감찰기구와의 중복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이다. 또한, 최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와 국민소환제 입법화, 고위공직자 자산백지신탁제도 도입 등의 공약을 발표했으나 실천의지는 불명확하다.	×
민주당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납세자소송법 도입, 인사청문회를 장관급 각료 전반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16대 국회 당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도입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실현 의지가 분명치 않고,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는 대통령 인사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큰 공약이다.	△
열린우리당	뇌물제공자를 의무적으로 기소하고, 부패사범의 10년간 공직진출 제한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의 선처를 주장하고 있고, 17대 총선에서 부패전력자들을 공천하여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백지위임신탁,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천의지는 미지수이다.	△
자민련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부정부패 재산 국고 환수 제도를 주장하지만, 이것들은 기존 정책들의 재탕에 불과하며, 돈세탁방지법 제정과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등 중요한 반부패 정책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당론을 취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불체포 특권의 포기, 불법정치자금의 전액국고환수, 노조에 의한 부패 감시 등을 제안. 그러나, 주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부패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 부족하다.	△

※참고 : 17대 공천자 중 부패관련인물 수 및 불법정치자금 수취액

	17대 공천자 중 부패관련인물수 및 불법정치자금 액수
한나라당	6명, 약 2200억원(세풍 166억, 안풍 1197억, 대선자금 840억원)
민주당	10명, 114억원(분당 이전 대선자금. 권노갑 박지원 자금 250억 별도)
열린우리당	5명, 114억원(분당 이전 대선자금. 권노갑 박지원 자금 250억 별도)
자민련	2명
민주노동당	0명 (원외정당이므로 동등비교 곤란. 당비에 의한 정당운용의 긍정성 인정)

2) 정치개혁

● 분야 총평

정치개혁은 16대 국회 개원 초기부터 16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로 손꼽혔다. 그러나 정치권은 16대 국회 내내 정치관계법 개정문제를 외면하다가 수천억의 불법자금이 대통령 선거전에 투입된 것이 밝혀진 뒤에야 정치개혁특위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이후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국민여론에 힘입어 정치자금법 개정은 상당히 진척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불법 자금 차단을 이유로 후원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에 법인세 1% 의무징수를 주장했던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선거법의 경우,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 등 돈 많이 드는 선거를 미디어 중심의 선거로 바꾼 것은 긍정적이나,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의 반발로 선거구의 조정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한계이다. 정당법의 경우, 지구당 폐지, 여성 비례대표 50% 의무화, 지역구 후보의 30%를 여성후보로 공천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관계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헌법상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선거법 제82조 6)가 도입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 전체의 기본권을 제약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의 발로일 뿐만 아니라 도입 과정에서도 충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권자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시대적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선거연령 인하문제 역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는 그 동안 많은 시민단체와 학계가 요구해 온 대표적 정치개혁 과제의 하나였다.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을 벌이면서 정치권은 젊은 유권자의 주권을 무시해 버린 것이다.

(1)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선거권 만 20세 주장을 고수하면서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하였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였다.

(2)새천년민주당

민주당은 '선거 연령 만18세 인하'의 입장을 채택하여 선거연령 인하에 적극적인 개정태도를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실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는 선거구획정, 의원정수 문제 등 밥그릇 싸움을 벌이느라 선거연령 인하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지 않았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도 찬성하였다.

(3)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의 경우 만18세 인하'의 입장을 채택하여 선거연령 인하에 적극적인 개정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열린우리당도 선거구획정, 의원정수 문제 등 밥그릇 싸움을 벌이느라 선거연령 인하 문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지 않았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는 반대하였다.

(4)자유민주연합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하여 자민련은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초지일관 선거연령 인하를 반대하여 '선거권 만20세'를 고집하였고, 결국 선거연령 인하를 무산시켰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도 찬성하였다.

(5)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에 대해 분명한 찬성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였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도 분명히 반대하여,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혁에 가장 적극적 입장으로 일관하였다.

●주요 정책별 평가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구 획정

한나라당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제를 축소시키려 하였다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치자 공여지책으로 의석수 전체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민주당	처음에는 전향적 자세를 보였으나 분당 이후 정치개혁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으며,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기습 제출하여 정치개혁안의 통과를 지연시켰다.	×
열린우리당	지역구 수를 늘리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석수 비율 등에서 자신의 안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
자민련	정치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태도를 보였다.	×
민주노동당	제대로 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원외정당인 까닭에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

○ 선거연령 인하

한나라당	현행 만20세 현상 유지	×
민주당	만18세 인하 찬성	○
열린우리당	만18세 인하 찬성	○
자민련	현행 만20세 현상 유지	×
민주노동당	만18세 인하 찬성	○

○ 인터넷 실명제 도입

한나라당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였다.	×
민주당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였다.	×
열린우리당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반대하였다.	○
자민련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였다.	×
민주노동당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반대하였다.	○

3)조세형평

●분야 총평

(1)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자유경쟁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공평한 조세제도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나라당은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을 분명히 반대함으로써 부의 무한 세습이 가져올 심각한 부작용을 외면했다. 나아가 땀 흘리지 않고 벌어들인 불로소득에 과세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의 무서운 결과는 지난해의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로소득과 부동산투기에 대해 원내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근절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지 않았다. 망국적 투기를 근절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조세정책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조세정책으로 투기를 잡을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공공연히 내놓아서 사실상 투기를 방조했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성장우선정책이란 자산가들이 땀흘리지 않고 번 불로소득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새천년민주당

분당 이전의 민주당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2002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이후 지속적으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여 제도 도입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완전포괄주의가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거나 외국과 법체계가 다르다는 식의 반대 주장에도 꾸준히 정책일관성을 유지한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또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했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유세를 다소간 현실화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분당 이후 부동산투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부작용 등을 언급하였고, 김종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부동산 보유세 중과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등, 보유세 강화에 대해 다소간 입장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3)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은 창당 시점을 고려할 때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보유세 현실화에 대한 논의에 처음부터 참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양 현안에 대해 일관되게 찬성을 표명함으로써 제도의 현실화에 기여했다. 특히 보유세 현실화는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강한 찬성의지를 표명

하고 있어 조세형평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4)자유민주연합

조세형평에 관한 자민련의 입장은 뚜렷하지 않다.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조세저항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유세 인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로써 조세형평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5)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대선에서 부유세를 대표적인 정책으로 내세울 만큼 형평에 대하여는 적극적이다. 민주노동당은 변칙증여를 근절하는 문제나 아파트투기를 잠재우기 위한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다. 다만 부유세는 조세형평을 넘어 분배형평이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어 좀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주요 정책별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한나라당	정부가 제출한 입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2002년 대선 당시를 비롯해서 한나라당은 지속적으로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다.	×
민주당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 후보가 제도도입을 찬성했고, 그 이후에도 찬성. 원내정당으로서 국회입법 과정에서 일관된 찬성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제도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
열린우리당	제도도입을 지지. 원내정당으로서 국회입법 과정에서 일관된 찬성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제도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
자민련	특별한 의견을 확인할 수 없음.	·
민주노동당	2002년 대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도입을 지지하고 주장해옴. 변칙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세의지가 가장 강력.	○

○부동산 보유세 강화

한나라당	원칙적 찬성 입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2003년 하반기의 극심한 부동산투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보유세 강화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
민주당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분당 이후에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부작용 등을 언급하면서 보유세 강화에 대해 다소간 입장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열린우리당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을 지지했고, 보유세 강화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17대 국회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
자민련	정부의 보유세 강화안에 대해 “조세저항이 생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란 단서를 달고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17대 공약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차원에서 ‘부동산 다보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중과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보유세 강화를 강도 높게 주문해왔을 뿐 아니라, 참여정부 출범 직전 정부가 보유세 강화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때도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과표현실화를 적극 주문했다. 또한, 부유세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

4)과거청산

●분야 총평

과거청산은 건전한 가치기준과 역사의식을 정립하고자 하는 정의실현운동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과거청산은 사대적이고 반민주적인 세력에 의해 왜곡당하고 탄압받으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학계와 민간단체의 주도로 본격적인 과거청산운동이 전개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은폐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각종 법률의 입법화 요구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그 중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했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이하 친일진상규명법)’은 16대 국회에서 차일피일 미루어지더니 불같은 여론에 밀려 누더기가 된 채 찬성 151표, 반대 2표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통과되자마자 법 제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 상태에서 성립한 것이므로 다시 17대 국회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말았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국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을 촉구했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의 경우, 16대 국회에서는 우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한 한나라당의 반대로 결국 찬성 72표, 반대 96표로 부결되고 말았다. 이 문제도 역시 17대 국회에서 다시 큰 쟁점이 될 것이다.

(1)한나라당

한나라당은 16대 국회에서 친일진상규명법의 내용을 협의하고 상정하는 과정에서 개악을 주도했으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은 우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여 당론으로 법안을 부결시키는 등 반개혁적인 성향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리하여 양 법의 개악과 무산을 주도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9명이 과거청산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들이 발표한 과거청산법안 관련 ‘결립들’ 의원(총11명, 나머지 2명은 민주당)에 선정되었다.

(2)새천년민주당

민주당은 몇몇 의원들이 친일진상규명법이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입법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은 있으나, 당 전체로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의 경우는 오히려 한나라당 입장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도 더 많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16대 국회 말기에 올수록 과거청산문제에서는 한나라당의 반개혁적 노선에 끌려가는 경향성을 보였다.

(3)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의 경우, 과거청산문제에 관해서는 16대 국회에서 입법화를 주도하면서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러나 친일진상규명법의 경우, 다른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친일파의 기준을 둘러싼 핵심 항목 등이 누락되는 등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17대 국회에서 약속한 대로 이를 개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의 경우에도 반드시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자유민주연합

자민련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대신 한나라당에 적극 동조하는 ‘정책부재’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며 반개혁적 태도를 취했다.

(5)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16대 국회에서는 원외정당이었지만, 친일진상규명법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의 입법화를 위한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했다. 17대 국회에서는 친일진상규명법의 개정과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의 통과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정책별 평가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친일진상규명법)

한나라당	법률안의 내용을 협의하고 상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진상조사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등의 개악을 주도하였으며,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누더기법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
민주당	뚜렷한 당론없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오히려 한나라 입장에 동조하는 국회의원이 더 많았다.	△
열린우리당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되는 과정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했으며 누더기법의 개정을 약속했다.	○
자민련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대신 한나라당의 태도에 적극 협조했다.	×
민주노동당	원의정당으로서 친일진상규명법의 원안 통과를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며 17대 국회에서의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천명했다.	○

○ 6.25 휴전 이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법)

한나라당	법률제정을 약속했던 3당합의를 깨고 우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여 당론으로서 법안을 부결시켰다.	×
민주당	몇몇 의원은 노력했으나 전체적으로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
열린우리당	법안의 협의와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했다.	○
자민련	일정한 태도 표명은 없었으나, 보수로 자임하면서 한나라당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했다.	×
민주노동당	원의정당으로서 이 법률안 통과와 관련된 각종 집회나 모임에 참석하는 등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으며 17대 국회에서의 법률안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천명했다.	○

5)평화통일

●분야 총평

(1)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는가 하면, 낡은 안보개념과 북한 위협론을 내세워 일방적인 한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묻지마 파병론자’인 송영선 박사를 비례대표로 영입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여론과 명확히 동떨어진 정책 의지를 재확인시켜주었다. 한미현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용산기지이전 반대와 한국군 이라크 파견 적극 찬성 등에서도 확인되었다.

최근 한나라당은 북미·북일 수교 적극 지원, ‘초당적 대북정책 기구’ 발족, 남북 접경지대 평화구역 설치, 비무장지대 자유무역화, 개성공단 개발은 물론 민간기업의 남북합작사업 참여 등과 같은 구체적인 대북정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16대 국회 당시에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남북한 간의 상호신뢰와 평화정착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남북경제협력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투자보장 4대합의서’ 발효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금강산 관광 보조금을 삭감하여 이 사업의 위기를 심화시켰으며, 북핵문제를 남북경협과 연계하겠다는 발상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진정성’과 ‘신뢰’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공약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보여준 경직된 대북정책에서 탈피하고자 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동안 한나라당이 정부의 대북지원 축소와 남북경협의 상호주의를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신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또한 남북경협을 북핵과 연계하고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유지한다는 기존의 입장에 대한 해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실천의지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2)새천년민주당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남북화해협력과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원칙에 따라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북핵문제 해결 또는 이를 위한 대북전력지원 문제 등에서 다른 당과 구분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실질적 근거는 없다. 한미관계개선에 있어서도 적극적 의회활동이나 발언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또한 한미동맹 관련 현안에 대

해 낡은 안보개념을 잣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원칙에 걸맞은 한미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라크 2차 파병 당시 권고적 당론으로 파병을 반대하였으며, 최근에는 파병 자체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3)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은 대북포용정책을 유지, 발전시키고 나아가 정상회담 정례화, 남북평화협정 체결 등 진일보한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 방안에서 그동안 협상의 돌파구가 되기 어려웠던 한미일 협의를 우선하고, 핵 문제 해결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의 단계론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세계전략 하에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재배치나 용산기지이전 협상이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한미동맹 재조정을 위해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열린우리당이 명분도 국익도 없는, 한국군의 이라크파견을 지지한 것은 그 동안 평화와 반전을 표방해 온 열린우리당의 입장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자유민주연합

자민련은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한미관계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자민련은 남북대결과 종속적 한미동맹이라는 냉전체제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의 북핵 및 대북정책은 분단체제 해소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목표에 걸맞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목표를 내세우고 있음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는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한미동맹 현안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한미관계를 재조정하려는 일관된 정책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라크 파병에 적극 반대운동을 펼침으로써 반전평화를 표방할 수 있는 정당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남한의 선군축 추진이나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별 평가

○이라크 파병

한나라당	한미동맹과 국익을 내세워 이라크 파병을 적극 지지하였고, 이른바 ‘묻지마 파병론자’인 송영선을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하였다.	×
민주당	2차 이라크 파병 동의안 표결에 유일하게 권고적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였고 최근에는 파병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
열린우리당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이라크 파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존의 비전투병 위주 파병이라는 당론을 바꾸어 정부의 전투병 위주 파병안을 추진하였다.	×
자민련	한미동맹을 앞세워 이라크 파병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이라크 파병으로 얻을 국익이 없으며 침략전쟁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파병에 적극 반대하였다.	○

○북핵 및 대북정책

한나라당	16대 국회에서는 햇볕정책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폐주기’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철저한 상호주의를 주장하였다. 최근 다소 진전된 대북정책을 발표하였으나,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계속 사용하고 핵문제를 대북지원 및 경험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입장의 변화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최근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
민주당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이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북한 주적 개념의 폐기, 정부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및 남북교류협력정책 등에 적극적이다. 한반도 비핵지대화 원칙에 따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6자회담을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북핵문제와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을 연계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북핵문제 해결노력과 남북경협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당과 구별되는 구체적인 실질적 노력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
열린우리당	기존의 남북교류협력 정책을 유지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남북평화협정체결, 개성공단 지원 등 남북한간 화해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의 변영을 추구하는 평화변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용납될 수 없으며 한미일 공조와 주변국들의 협력을 통해 핵문제를 풀어나가되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북한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는 동시병행 추진되어야 하며 대북지원 등 남북대화를 핵문제 해결의 유용한 창구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
자민련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북한 주적 개념의 유지와 철저한 국가안보를 강조한다. 또한 남북한 간의 폭넓은 협력관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부 주도의 대북사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북한 핵문제 역시 한미공조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대북지원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민주노동당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상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이를 위한 협약·기구·법·제도를 수립하여 보다 자주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선제공격 배제 선언과 북한의 NPT체제 복귀, 남한의 선군축 추진, 그리고 남·북·미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북한핵 해결을 위한 단계별 이행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핵문제와 경제지원 문제를 연계해서는 안되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대외적 의존성을 높이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 한미군사동맹(주한미군재배치, 용산기지이전, SOFA 개선)

한나라당	SOFA 운용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자주국방의 어려움과 안보공백을 이유로 주한미군재배치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이 요구했던 28만평 부지의 제공 등을 주장하며 용산기지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
민주당	SOFA 운용개선이 필요하며 주한미군재배치에 찬성하되 이에 따른 군사적 안보는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 측의 세계군사전략에 따른 용산기지 이전이기 때문에 이전 비용 전액부담에 반대하고 있다.	△
열린우리당	SOFA 운용개선이 필요하나 공무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 이양 문제에는 소극적이다. 또한 한반도 내 주한미군재배치를 미국 측의 군사전략이라는 이유로 한국 측의 적극적인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으며 한국 측의 전력증강에 맞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산기지이전 비용과 관련해서 한국 측의 이전요구도 고려해야 하지만 전액부담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자민련	SOFA 운용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안보공백과 북한 위협을 내세워 주한미군재배치와 용산기지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SOFA 운용 개선과 재판권 이양이 미군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용산기지이전을 포함한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하여, 미군의 한국 주둔은 한국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인 만큼 재배치가 아닌 단계적 철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6) 양성평등

● 분야 총평

지난 16회 국회에서, 여성단체들은 여성들이 느끼는 생활상의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여론화하고 법안까지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성매매방지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의 삶은 가족구성원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한 사회의 여성문제에 대한 개혁성은 환경·노동·평화·인권 등 다른 분야의 정책판단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출발로 제시된 호주제 폐지 문제 역시 결국 16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17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 동안 각 정당들은 '여성들의 표'를 얻기 위해 수없이 많은 정책을 내걸었고,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선언해 왔지만, 막상 가장 기본이 되는 '호주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조차 여전히 강건한 '남성중심적'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1) 한나라당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은 호주제 폐지 문제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가족 해체', '남녀평등과는 무관' 등의 발언을 반복하였고, 심지어 '공산주의'라는 '색깔론'마저 주장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총선여성연대에서 발표한 공천반대자 8명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 5명이나 선정되고 말았다(나머지 3인은 자민련 의원). 한나라당은 17대 총선의 여성공약에서 '호주제 폐지'를 밝히고 있으나, 여성부문 공약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총선여성연대 자문). 또한 지난 3월 24일 경실련에서 발표한 정당평가 자료에서도 한나라당은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다는 이유로 명확한 찬성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2) 새천년민주당

지난 16대 국회에서, (분당 후 결과적으로 열린우리당 소속이 된) 당시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주도적으로 호주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법사위에서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법사위의 한나라당, 자민련 의원들의 반대와 민주당 일부 남성의원들의 비협조로 16대 국회에서는 호주제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으며, 총선 공약으로도 이를 다시 분명히 밝히고 있다.

(3)열린우리당

지난 16대 국회에서 호주제폐지 법안의 통과를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한 당시 민주당의 여성의원들은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바꿨다. 17대 총선 공약으로도 다시한번 호주제 폐지를 분명히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호주제폐지에 가장 적극적인 원내 정당이다.

(4)자유민주연합

자민련 소속 일부 남성의원들은 호주제 폐지가 ‘남녀평등과는 무관’하다는 발언을 반복하였고, 결국 총선여성연대에서 발표한 공천반대자 8명 가운데 자민련 소속 국회의원이 3명이나 되었다. 의원의 숫자를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민련은 현행 호주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호주승계순위 조정과 개별호주제 등의 도입은 검토하겠다는 기존의 호주제 폐지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5)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가장 적극적으로 ‘호주제 폐지’를 주장해 오고 있으며, ‘1인 1적제도’를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등 ‘양성평등’에서 가장 개혁적이고 적극적인 정당으로 평가될 수 있다.

●주요 정책별 평가

○호주제 폐지

한나라당	2002년 대선 공약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으나, 당시 열렸던 여성정책 TV토론회에서 이회창 후보가 호주제의 임기내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17대 총선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약속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공약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지난 2003년 11월 26일 여성연합이 실시한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회의원 찬반조사(전체 응답89명) 결과 반대를 표시한 6명 가운데 3명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 가장 많았고(찬성 : 24명), 2004년 2월 4일 총선여성연대가 발표한 ‘공천부적격 반여성 후보’ 8명 가운데서도 5명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다.	×
민주당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노무현 후보는 ‘호주제 1년 이내 폐지’를 주장했다. 2003년 11월 26일 여성연합이 실시한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회의원 찬반조사에서 민주당 의원 가운데 1명이 반대를 표시하였고(찬성 : 20명), 총선여성연대 발표 ‘공천부적격 반여성 후보’에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17대 총선공약에서도 호주제 폐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열린우리당	2003년 11월 26일 여성연합이 실시한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회의원 찬반조사에 반대를 표시한 의원이 1명도 없었으며(찬성 : 24명), 총선여성연대 발표 ‘공천부적격 반여성 후보’에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17대 총선 공약에서도 호주제 폐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주장하고 있다.	○
자민련	2003년 11월 26일 여성연합이 실시한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회의원 찬반조사에 2명이 반대를 표시하였으며(찬성 : 2명), 2004년 2월 4일 총선여성연대가 발표한 ‘공천부적격 반여성 후보’ 8명 가운데서도 3명이 자민련 소속 의원이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노동당은 ‘호주제의 즉각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호주제 폐지의 구체적 대안으로 ‘1인 1적제’를 제안하는 등 가장 뚜렷한 폐지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

7)지속가능한 환경

●분야 총평

새만금 간척사업과 부안 핵폐기장이라는 사회환경적 사안을 중심으로 16대 국회를 평가할 경우, 기존 정당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1)한나라당

16대 국회의 회기 동안 한나라당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정치적 공방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정당간의 차이에서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입장을 개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공방을 넘어서 현실적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연결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새만금 간척사업과 핵폐기장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식 없이 기술적인 해결에 주목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새천년민주당

분당 이전에 민주당은 환경 관련 현안에서 명확히 반환경적이었다. 16대 국회 회기 동안 환경문제를 철저한 지역주의 및 개발주의 입장에서 다루었으며, 환경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소속 의원들 및 당 전체의 입장에서 국가 운영의 책임주체다운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새만금 문제의 경우 철저히 정치적 판단 및 이해를 기반으로 대응하였다. 반면 부안 사태의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나, 이는 분당으로 드러난 노무현 정부와의 갈등의 산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의 긍정적 결과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3)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은 부안 사태에서 실질적인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가장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4)자유민주연합

자민련은 특별하게 평가할 내용은 없으나 새만금 간척사업의 계속, 부안 핵폐기장의 재검토 반대 등 반환경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5)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원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면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주요한 현안 및 활동에서 근원적인 환경인식 및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입장을 개진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활동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구호 및 선언 수준의 해결 방안, 활동 양식은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정책별 평가

○새만금 간척사업

한나라당	사업의 중단과 계속 개발의 입장 속에서 모호함을 유지하며, 선거 시기에 지역표를 흡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발이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잠정 중단과 새로운 대안모색을 위한 국회 기구 구성 제안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다수 참여하였다.	△
민주당	일관되게 새만금 간척사업의 강행과 합리적 대안 모색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16대 회기 내내 새만금 간척사업의 강행 입장을 취하며, 당내 소장 의원들의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위한 시도를 가로막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전북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새만금 강행 의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기도 하였다.	×
열린우리당	일관되게 새만금 간척사업의 강행과 합리적 대안 모색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전북지역 지구당 개소식과 17대 공약을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
자민련	새만금 간척사업 지속을 당론으로 정하여 반환경적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
민주노동당	가장 일관되게 친환경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참여하여 새만금 보전활동 지속적으로 전개하였고, 전북지역 차원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선전하였다.	○

○부안 핵폐기장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의정을 좌우할 수 있는 최대당임에도 불구하고 부안 사태를 노무현 정부를 공격하기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였을 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민주당	민주당은 부안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첨예하게 노무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정쟁의 수단이었을 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과 진정한 노력이라 볼 수는 없다.	△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은 부안 사태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표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모두 부안 핵폐기장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실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 실질 여당으로서 대다수 주민의 반대와 희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방치하였다. 부안주민의 자발적인 주민투표 이후에는 사태의 방치와 침묵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였다.	×
자민련	자민련은 부안 사태와 관련하여 정당 차원의 대응은 없으나, 원점 재검토를 거부하는 반환경적인 모습을 취하였다.	×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원외정당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책 전반의 변화와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사회적으로 제기하며, 부안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직시하였고 사태 해결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자세를 보였다.	○

8)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해결

●분야 총평

실업문제 및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이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에 밀착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으며, 열린우리당 역시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과 새천년 민주당은 구체적 정책이 빈곤할 뿐 아니라 특히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의지 자체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자민련은 모든 부문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취약하다. 노인인구의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도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다.

(1)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여러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른 정당과 비교해 볼 때 새로운 정책이 눈에 띄지 않으며,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책이 빈곤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중시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실업과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실현의지를 갖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2)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유사하게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추상적 공약밖에 없다. 노인인구 재취업에 관해서도 고용체계 전환 등 일반적 공약 이외에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서도 유연화 정책의 부작용을 줄인다는 것 이외에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3)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은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서비스 산업 육성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정책 축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 확대, 보험적용 확대, 비정규직 차별해소 법적 보장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 두 부문에서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보다 다소 풍부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재취업에 대해서는 다른 당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

(4)자민련

자유민주연합은 다른 정당들과 비교했을 때 정책적 대안이 가장 취약하다. 노인인구 재취업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공약을 내놓았으나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이 부재하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심 자체를 보이지 않고 있다.

(5)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완전고용'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을 만큼 실업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이다. 특히 주5일 근무제의 전면 실시, 복지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정책이 돋보인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해결도 민주노동당의 10대 공약의 하나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개정, 파견근로법 폐지 등과 같이 현행 법률의 개폐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적 비전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역시 노인인구의 재취업 해결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취약하다.

●주요 정책별 평가

○(청년)실업

한나라당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하여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여기에 1조 8천억 원을 투자,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민주당	일자리 창출을 10대 공약의 하나로 내놓은 새천년민주당은 실업 문제의 해결책을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 찾고 있다.	△
열린우리당	서비스 산업 육성, 공공부문 고용증대,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특히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 통합적 청년실업대책인 YES Korea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
자민련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취업지원, 취업정보공유, 공익요원 확충 등을 제시했지만 정책의 구체성과 적극성이 매우 취약하다.	×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10대 공약의 첫 번째 순위에 '완전고용 사회 실현'을 내걸었다. 노동시간 단축, 복지중심 투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무고용제 실시 등 청년고용 촉진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

○노인인구의 재취업

한나라당	임금피크제 도입, 전직훈련 지원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확대 등을 해결방안으로 내놓았다.	△
민주당	고용체계를 연령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임금피크제와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
열린우리당	공공부문의 고령자 고용을 유도하고, 장려금, 지원금 등의 형태로 고령자 고용을 지원하며,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연령차별금지제도 등 제도적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
자민련	자민련은 고령자고용촉진법, 노령인력은행, 예비학교 등과 같은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내놓았다.	△
민주노동당	임금피크제를 정년 이후 도입하고, 노인노동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간접지원한다는 입장이다.	△

○비정규직

한나라당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남용해소를 위해 고용차별금지법 제정, 근로자파견법, 산재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주장했으나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하는 등 적극적 해결 방안의 모색이라 보기는 어렵다.	△
민주당	노동시장 유연화를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고용불안정이나 비정규직의 남발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적 대책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문제해결 방향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유도하고, 탈법적 고용형태에 대한 감독강화와 복지혜택을 확대한다는 주장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
열린우리당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을 점차 축소하며, 비정규직의 4대 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자민련	비정규직 확산 억제책 강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실효성 제고 등 매우 추상적 수준의 정책만 제시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10대 공약의 다섯 번째 공약이다. 민주노동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 최저임금법 개정, 파견근로법 폐지 등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개혁을 약속했다.	○

9) 사회복지 확충 등 사회적 기본권

● 분야 총평

각 정당의 사회복지분야의 공약은 기본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열한 문제인식과 원인분석 없이 기존 정책을 재탕하거나, 그럴듯한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비전, 방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대안이 결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정당간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식별하기란 어려웠으나 약간씩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1)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先성장 後분배’, 사회복지에서 시장 및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 전통적인 가족의 강조, 경쟁과 효율성 등을 중심에 두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회복지예산의 확충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마련할 수 있는 재원과 예산배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GDP 대비 12% 수준으로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사회복지예산이 70조를 상회하게 된다. 2004년 정부 일반회계 예산이 118조임을 감안하다면 향후 5년 이내 정부 예산의 60%가 사회복지분야에 지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사회복지에 대한 입장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하겠다. 새천년민주당은 일반회계예산의 15% 이상 수준, 열린우리당은 매년 경상성장률보다 2~3%를 상회하는 수준의 사회복지예산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지난 5년간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추이와 비슷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이 정도 수준의 예산확충으로는, 이들 두 정당이 이번 17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들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사회복지예산의 비현실성과 마찬가지로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사회복지예산 정책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고민부재의 정책제시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3) 자유민주연합

자유민주연합은 정책기조에서 한나라당과 동일하지만, 국가의 역할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 자

체의 입장 자체가 혼란스러운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자민련은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GDP 대비 12% 수준으로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사회복지예산이 70조를 상회하게 된다. 2004년 정부 일반회계 예산이 118조임을 감안하다면 향후 5년 이내 정부 예산의 60%가 사회복지분야에 지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자민련은 GDP 12% 수준을 14조원으로 제시하는 등 부정확한 통계에 기초하여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4)민주노동당

이처럼 각 정당의 공약이 빈약하지만 16대 총선 공약에 비해서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민주노동당의 본격적 등장으로 사회복지분야의 공약에서 4:1 구조가 형성되었다. 민주노동당은 기존 원내정당들과는 달리 사회복지를 가장 핵심적인 공약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제도와 정책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기여 기초연금제, 국방비 감축과 조세개혁을 통한 사회복지예산의 획기적인 확대,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 제공 등은 기존 정당들의 공약과는 다른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새로운 시도들이 사회복지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다만, 민주노동당의 사회복지 예산은 현재보다 4~5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비록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도입 등의 세제개혁, 국방예산 감축 등 나름의 예산확보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의 실현가능성은 여전히 의문시된다.

●주요 정책별 평가

○사회복지예산 확충

한나라당	사회복지 예산확충에 빈곤문제에 대한 대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재원조달에서 한나라당이 제시하고 있는 세원확대와 누진과세의 방식으로 GDP 대비 12%(70조원)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현실적 규모의 예산규모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이고 적절한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민주당	사회복지 예산확충에 빈곤문제에 대한 대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재원조달방식으로는 조세제도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회계 15% 수준의 사회복지 예산규모로는 민주당이 제시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열린우리당	사회복지 예산확충에 취약계층, 노인복지 등의 빈곤문제에 대한 대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재원조달방식으로는 예산절감, 지출구조 조정,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의 방식이 제시된다. 열린우리당 역시 사회복지예산규모를 경상성장률보다 2~3% 높은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정도 예산으로는 열린우리당의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기란 불가능하다.	×
자민련	사회복지 예산확충에 빈곤문제에 대한 대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필요한 사회복지예산 재원조달은 세출예산의 증액으로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련은 사회복지예산의 기본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GDP 12%를 14조원으로 제시), 재원조달의 현실성은 지극히 낮다.	×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의 보편적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과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차순위로 상정하고 있다. 다른 정당에 비해 재원조달에 대해서 비교적 체계적인 고민을 담고 있다(세제개혁, 국방예산 감축 등). 다만, 현재보다 4~5배 이상의 사회복지예산 확충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제기된다.	△

○ 빈곤문제와 공적부조

한나라당	자활기반 마련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요건완화(1촌 이내 및 배우자) 및 간주부양제도 폐지, 최저생계비 지급대상자 확대 및 지역별 차등적용, 저소득층 아동수당 제도 도입과 경로연금대상 확대 등 기존 제도 내실화와 빈곤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16대 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할 당시 급여자 확대 문제에서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등 공약의 진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
민주당	최저생계비 산출기준 개선, 자활지원법 제정, 추정소득 인정제 개선을 통한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확대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민주당 역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당시 급여자 확대 문제에 대해 매우 소극적 태도를 취한 바 있다.	△
열린우리당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1차 안전망 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자활정책 활성화, 차상위 계층 부분급여 실시), 지속적 소득 재분배 정책 시행 등을 제안하고 있고, 다른 정당들과 달리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적 예방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
자민련	최저생계비 지급대상자 확대, 지원 급여수준 인상, 자활지원센터 증설, 직업훈련, 구직알선 등을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민련 역시 16대 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소극적으로 임하였고 정책의 구체성과 적극성이 부족하다.	×
민주노동당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확대와 개별급여 보장, 자활제도를 독립시킨 자활지원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역시 빈곤문제의 사전적 예방을 위한 정책제안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하다.	△

○국민연금제도 개혁

한나라당	사각지대 해소, 재정추계를 실시한 후 재정안정화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 있고, 연금기금운용위원회(독립기구)의 상설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와 급여 조정을 통한 재정안정화 대책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기초연금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보험료와 조세의 병해방식을 제안한다. 하지만, 보험료 방식의 경우 자영자 소득과약과 사각지대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다는 점을 간과하여 정책의 현실성이 떨어진다.	△
민주당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가입자 단체의 대표성 강화, 가입자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완화, 재정 안정성 확보를 주장하고 있으나, 재정안정성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또한, 기초연금제에 대해서는 '장기적 검토'라는 소극적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다.	△
열린우리당	기금운용과 재정관리의 중립성 보장,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그리고 최소급여수준 유지를 전제로 보험료와 급여 조정을 제안하여 재정문제 해결방안을 밝히고 있다.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접근하자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자민련	미가입자 원인별 대책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가입기간이 짧은 대상에게 소액 기본연금 지급, 적극적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결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 기초연금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보험료와 조세 방식병행을 제안하는데, 이 경우 자영자 소득과약과 사각지대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다.	×
민주노동당	연금기금의 전략적, 공공적 활용을 위해 주식과 부동산 투자확대 반대, 전사회적 특별위원회 구성과 논의를 제안하고 있다. 무기여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재원조달은 전액 조세로 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사각지대 해소에는 효과적인 방식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

○의료보장

한나라당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규정대로 이루어지도록 재정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소극적이다. 공공의료 확충방안으로 국가기관 확대 제시하고 있고, 보충적 민간보험의 도입과 제한적인 의료시장 개방에 찬성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기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이다.	△
민주당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에 동의하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관리공단의 보험자 역할의 강화를 통한 지출통제라는 적극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방안으로 공공의료 비중 확대에 대한 구체적 수치(30%) 제시하고 있고,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기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이다.	△
열린우리당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에 동의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가기관 확대를 제시하고 있고,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대하며, 전체적으로 기존 정책의 나열 정도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
자민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유보적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자영자 소득과약을 통한 세원 확대를 제시하는 등 매우 소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에도 소극적이며,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시장 개방에는 찬성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건강보험 급여확대 및 중기적으로 무상의료를 통한 보장성 강화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누진제와 급여지불방식의 근본적인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의료 확충방안으로 공공의료 비중 확대에 대한 구체적 수치(40%)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시장 개방에는 반대하고 있다.	○

10) 집회결사, 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 기본권

● 분야 총평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이자 정치적 기본권의 근간이 된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1962년말 제정된 이후 몇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유를 제한하는 법으로 작용해 왔다.

그 동안 시민사회와 민중운동진영을 중심으로 ‘집시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제16대 국회는 여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2003년 12월 29일, 국회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개악집시법을 통과시켰다(법률 제7123호). 이는 전혀 뜻밖의 결과였다. 2003년 10월말 헌법재판소가 “외국공관 내 100m 이내 집회 시위의 전면적인 제한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집시법의 개정이 불가피해졌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집회의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시법 개악은 불철저한 개혁여당과 보수야당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언제든지 후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현재 개악집시법에 대해서는 불복종운동이 진행중이며 위헌 헌법소원도 제기되었다.

(1) 한나라당 · 새천년민주당 · 자유민주연합

집시법 개악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었다. 그들은 경찰청이 개악집시법안을 제시하자마자, “정부여당이 추진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단 2주만에 집시법개악을 이루어냈다. 소위 ‘질서유지, 또는 민원해소’라는 가치를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세운 결과였다. 자민련도 마찬가지로

(2)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은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위원회 소속의원이 모두 불참하였고,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하는가 하면 본회의 투표에서 30명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성의를 보였다. 그러나 수정안의 내용은 개악집시법안의 전면적 부정이 아닌 자구 수정 차원이었다는 점에서 확실한 반대입장을 실천하려 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실질적 여당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이 경찰청이나 청와대의 움직임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했고, 결국 악법통과를 막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3)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집시법 개악에 대해 시민사회, 민중운동진영과 완전히 입장을 같이 하였다. 민주노동당은 행자위 대안 채택 이후, 법사위 통과 당일, 본회의 통과 이후 등 지속적으로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논평과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집시법 개악으로 인한 시민적 기본권 제약에 가장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른 정당들과 달리 17대 총선 공약에서 개정 집시법의 재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였다.

●주요 정책별 평가

○집시법 개정

한나라당	2003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정부는 집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3년 11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경찰청의 적극 로비 이후 행정자치부 원안에서조차 없던 집회 신고 시간을 3백 60시간~48시간 전으로 제한, 집회에서 폭력 발생시 해당 단체의 당해 연도 집회 금지와 같은 목적의 다른 집회 금지, 외교기관 주변 집회 선별적 허용 등 추가된 소위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로 상정되었다. 이 때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이를 주도적으로 통과시켰으며, 이후 본회의에서 법사위 원안대로 통과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찬성투표를 하였다.	×
민주당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도 집시법 개악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 하였고, 2003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도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
열린우리당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에 최소한의 성의를 표현하였다. 실제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위원회 소속인 천정배, 최용규 의원 둘 다 불참하였고, 2003년 12월 27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본회의 투표에서 30명이 반대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정안의 내용은 집시법 개악안의 전면적 부정이 아닌 자구 수정 차원이었다는 점에서 확실한 반대입장을 실천하려 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
자민련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나, 집시법 개악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찬성 투표.	×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행자위 대안 채택 이후, 법사위 통과 당일, 본회의 통과 이후 등 지속적으로 집시법 개악에 반대하는 논평과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집시법 개악으로 인한 시민적 기본권 제약에 가장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

11) 교육 민주화

● 분야 총평

(1)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그동안 교육주체들이 제기했던 각종 개혁정책과 주장에 대해 지극히 둔감하거나 격렬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사립학교법 개정, 고교평준화 등 거의 대부분의 정책영역에서 한나라당은 뚜렷한 보수성향, 나아가 반개혁적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경쟁'과 '수월성'에 입각한 정책들이 대다수이고 교육민주화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지극히 무관심하거나 반대되는 정책을 제출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집단 특히 교육계 기득권층이나 상위계층에 편향된 정책이 다수라는 사실이다. 고교평준화는 '급속한 해체'를 이끌 방안들을 다수 제출했으며 특히 자립형 사립고 확대, 특목고 확대를 기본 정책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득권층을 의식한 편향된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다만 열린우리당이나 다른 정당들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하였다. 기본기조는 대단히 보수적이고 반개혁적이지만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근거를 분명히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공약이 절충된 듯한 느낌을 주며, 전체적으로 급조된 인상이 강하다. 다만, 전체적인 정책의 기조와 내용은 한나라당보다는 열린우리당과 유사한 양상이다.

(3)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의 교육공약은 구체성과 선명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절충적인 방안을 모호하게 제시하거나 심지어 민감한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공약 자체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애매한' 표현으로 이후 교육부문에 있어서 국회활동의 방향을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즉,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입장' 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는 부각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총선교육연대나 교육운동진영의 개혁요구 사항이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고교평준화에 대해 '기조 유지'를 기본입장으로 밝힌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강화나 내실화 방안 없이 '보완'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평가되었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교평준화의 점진적 해체 방안이

아니냐는 교육주체들의 우려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4)자유민주연합

자민련은 주요 영역에 대해 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공약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그나마 제시된 공약들도 반개혁성이 뚜렷했다.

(5)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비록 원외정당이긴 하지만, 교육부문 전체를 망라하여 가장 개혁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성실하고 꼼꼼하게 제시하였으며, 가장 높은 정책 일관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 민주성이라는 가치를 정책 속에 담기 위한 노력이 높게 평가되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도 총선교육연대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여 전국화, 실질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아 종합적인 중등교육개혁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고, WTO교육개방에 대해 ‘공공성’에 입각한 문제의식에 기초해 명확한 반대입장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공공성 강화에 입각한 정책은 거의 공교육 전반을 개편해야 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과제들로 보인다. 이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자신이 견지하는 개혁적 정책들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정책별 평가

○ 고교평준화, 자립형 사립고 정책

한나라당	특목고, 특성화고, 자립형 사립고 대폭 확대, 희망하는 사학은 평준화에서 제외, 선지원·후추첨 방식의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이는 평준화의 급속한 해체를 지향하는 정책이다.	×
민주당	고교평준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자율학교,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등 학교형태의 다양화를 적극 추진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평준화를 보완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의 점진적 해체 정책이 중심이다.	△
열린우리당	평준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학교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특성화 학교 및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의 평준화 점진적 해체 정책으로 볼 수 있다.	△
자민련	고교평준화 폐지를 추진하며, 자립형 사립고를 더욱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평준화의 즉각 해체 방안이다.	×
민주노동당	비평준화지역을 당장 평준화하고, 외국어,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고의 폐지, 중고등학교의 과정 통합을 주장한다. 평등정신에 기초하고 있으며, 교육평등을 위한 평준화를 방안을 지지하면서 교육내실화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

○ 외국교육기관 영리인정 등의 내용을 담은 WTO교육개방

	평가(1)	평가(2)
한나라당	17대 총선 공약에서 당면 현안인 WTO교육개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다만, 한나라당은 지난 2월 4일 최병렬 대표의 국회연설을 통해 “교육시장을 개방하여...교육시장의 무한경쟁시대를 열 것입니다”라는 해서 WTO교육개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민주당	교육개방에 찬성하고 있다.	×
열린우리당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	•
자민련	교육개방에 찬성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16대 대선에 이어 17대 총선 공약에서 WTO교육개방을 “교육마저 이윤의 대상으로 삼는 국제교역 협상이며 교육주권 상실, 교육상품화와 불평등 심화를 몰고 오는 것”으로 규정하고 “교육개방 추진이 아닌 교육투자 확충과 교육시스템 개편으로 교육의 질 상승”할 것을 내세워 교육개방에 대한 선명한 반대, 저지 입장을 일관성있게 밝혔다.	○